◆ 각 대선후보 공통질문

잘 아시다시피,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 입니다.
또 지난 3월 23일,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질문1)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같은 세금을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양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것은, 그것이 진상규명과 치유의 첫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선체 인양이 이루어져야 이를 토대로 비로소 참사 원인이나 구조·수습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원인을 밝혀야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유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도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이 꼭 필요한데, 이 역시 선체 인양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2) 후보님께서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치판단 기준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과정의 충실함과 인간의 존엄보다는 결과적 효율과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여 의사결정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대로 이명박 정부는 선박 연령제한을 연장했고, 선사는 수익 확보를 위해 과적을 했으며, 거기에다가 고박도 부실하고 평형수를 무시하는 등 안전의식까지 결여되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경제적 관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효율보다 기본을,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질문 3) 세월호 참사는 공직사회 개혁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해피아', 허술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징계, 기강해이 등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요?

공직자의 의사결정 기준은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공직자의 청탁이나(전관예우-현관배임 문제), 혹은 자신의 퇴직 후 자리와 안위, 기타 사익으로 인해 공정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사고의 원인과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연안여객선의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객선의 운항관리조직을 해운조합에서 분리시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시켰을 뿐, 연안여객선에 대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비전문적이고 허술합니다.

이 문제들이 총망라된 개념이 바로 행정직 위주의 공직운영과 '관피아'일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 전문가를 기용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시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법 개정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논의의 개시를 촉진하고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취업제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기는 했는데, 사각지대는 없는지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강제력과 실효성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질문 4)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컨트롤타워의 실종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컨트롤타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재난안전사고 대응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현장 책임자에게 강력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본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각 분야가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낼 능력이 있는 재해 및 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국민안전처(또는 해당 소관 기관)의 일차적 책임과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 그 밖의 지원 강화 역시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해와 재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군-경-소방기관의 공조 체계와 합동 훈련을 강화해서 선진적인 구조와 구난 전문 체계를 구축하여 '인재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몇몇 개인의 희생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5) 세월호 참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함께 국가의 안전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시는 지요?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불충분했습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특조위는 여러 제약들로 인해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끝내 종료되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재발방지 대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이 사고에 대해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 국가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와 진영논리화로 위기를 탈출하는 길을 택했고,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6)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가 안전시스템 개혁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후보님은 (국회의원으로서, 때론 공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떠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그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 시절,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성역없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 끝에 개시한 특조위 조사도 정부의 방해 속에 조기 종료된 문제가 있어, 지난 12월에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발의 당시와 달리 선체가 인양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지난 특조위 활동 중에는 특조위가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에 출석·진술청취·자료수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 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선체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면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는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지난 28일 출범했습니다.

질문 7) 후보님께서는 현재 “선체조사위”가 갖고 있는 현재의 권한으로도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의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만약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이 보완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등은 선체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체조사위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업무범위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해석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체조사위의 ‘점검’ 결과에 적극 따르며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혹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든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질문 8) 미수습자 수색과 관련해, 선체를 절단하자는 견해부터 증거물이니까 절단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미수습자 수습 방식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유해 유실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요?

선체조사법은 미수습자 조기수색과 함께 진상규명을 선체조사위의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색하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체를 절단한다 해서 과연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할 것인지 미지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훼손 없이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정확한 선내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수색작업 방법을 결정해야지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이 선체절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색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수색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객실은 침몰원인 규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므로 필요한 경우 부분적 절단을 고려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면 진상규명과 관련있는 타기실, 기관실, 화물창 등의 경우 절단이나 그밖의 훼손은 곤란합니다.

유실 대책으로는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침몰 해역에 대한 수색입니다. 이후의 추가적인 대책은 해당 해역과 선내 수색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 시 인근 해역의 수색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질문 9) 2016년 9월 30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됐고, 현재 2기 특조위 출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법안에 어떤 입장(찬반 포함)이신지요? 또 2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 권한을 갖는 방법과 독립적으로

조사 권한(수사권, 기소권 포함)을 갖는 두 가지 방법이 제기되는 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선체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기 특조위 출범에 찬성합니다. 지난 12월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에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주는 것 또한 찬성하며 앞서 답변했듯 조사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권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강제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영장은 그 청구권자가 검사로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권을 갖춘 특조위의 단독 조사'는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고(특조위에 검사가 있어야 하므로) 특검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체계상 입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질문 10) 미수습자가 수습되고 세월호 선체 조사가 끝난 이후 세월호 선체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선체조사법에 따르면 선체조사위가 조사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 포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체조사위가 수립한 계획을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국가 부재의 상황에서 벌어진 인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가 이 비극을 기억하고 향후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선체 보존 및 추모·안전교육공간 조성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11) 416참사 가족협의회는 차기 정부에 선체인양(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선체보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징계), 대책 수립 및 실행,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보상 등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정부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책 수립과 집행은 가능하나, 정부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참사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책 수립과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정부특별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을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후보님별 개별 질문입니다.

◎후보별 개별질문

(안철수 후보님)

질문12) 안철수 후보님은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해양경찰청 부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해경청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전의 방재청, 해경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내놓은 국민안전처 신설·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는 재난대응능력이나 조직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내놓은 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해상공신력이 약화되었고, 긴급 상황에서 안전처장관과 해경본부장 간 지휘체계 혼선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형 재해·재난 상황을 가정할 때 현장에서 범정부차원의 인적, 물적 구호 자원 요청이 상부로 전달되어 다시 현장에 투입되기에는 지휘체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수사권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된 점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해양주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당시 해경이 현장 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그 동안 해난구조 인프라 확충도 소홀히 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을 단순히 세월호 이전과 같은 형태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경청 독립은 재난에 대한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과정에서 국가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휘체계를 단순 명료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무능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덧붙여 재난안전통신망에 관해 설명드리면, 현재 재난대응기관들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합한 단일통신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국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구축을 완료하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질문13)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팽목항을 네 차례 방문하고, 꾸준히 세월호 관련 글을 SNS에 올리시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정 활동이나 정책 개발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직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당대표로서든 국회의원으로서든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들께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재난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특조위 2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발의해 두었는데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노력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평가받겠습니다.

질문14)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204명에 169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 후보님은 표결에는 불참한 것으로 나옵니다. 불참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선체조사법의 본회의 상정은 그 본회의가 있었던 3월 2일 오후에야 비로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외신기자클럽 토론회가 사전에 잡혀있었고 해당 일정의 변경이 어려워 표결 불참이 불가피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선체조사법은 여야 지도부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다만 법사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격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부결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설명드립니다.